

# 광주 학교 10곳 중 8곳 스프링클러 없다

325곳 중 78곳만 설치

성폭력 자치위 심의 건수도 매년 급증  
전문상담교사·상담사 처우 개선 시급  
광주시의회, 시교육청 시정 질문

광주 지역 학교 대부분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광주 일선 학교에서 성폭력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도 급증했다.

14일 광주시의회 황현택 의원의 시교육청에 대한 시정 질문 자료를 보면 광주 학교 325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24%인 78곳에 불과했다. 학교 10곳 중 8곳 가량이 스프링클러가 없는 셈이다. 유치원은 11곳 중 10곳에 설치돼 설치율이 높았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153곳 중 24곳에만 설치돼 설치율이 16%에 불과했다. 중학교도 90곳 중 16곳(18%)에만 설치됐다. 고등학교는 66곳 중 26곳(39%), 특수학교는 5곳 중 2곳(40%)에만 설치됐다.

황현택 의원은 "신규 학교 건설 및 증축 시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만 설치해 검토해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소방법 개정에 맞춰 설치를 확대하겠다"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서와 종합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본회의 시교육청에 대한 시정 질문에서 "학교 급별 성폭력 사안 관련 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을 보면 2018학년도에 2014학년도 대비 건수가 급증했다"

며 대책을 촉구했다.

심의 건수는 2014학년도 51건, 2015학년도 78건, 2016학년도 102건, 2017학년도 129건, 2018학년도 172건이었다. 4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었다.

2014학년도와 2018학년도를 비교하면 가해 학생은 81명에서 195명으로, 피해 학생은 103명에서 224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8학년도에는 직전 4년(2014~2017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중학교를 제외하고 초·중·고등·특수학교에서 모두 가해·피해 학생이 큰 폭으로 늘

었다. 특수학교에서도 해마다 0~4명이었던 피해 학생이 지난해에는 12명이나 됐다.

장재성 의원은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교내 성폭력은 발생 사안 처리보다 방지가 근본적으로 우선돼야 한다"며 "민감하고 어린 학생들이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으니 교내 성폭력에 부모 이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신고가 활성화하면서 작은 사안이라도 반드시 심의하도록 한 방침에 따라 심

의 건수도 차츰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 장연주 의원은 이날 전문상담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전문상담사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의 급여와 복리후생이 큰 차이를 보인다고 국가인권위의 의견대로 임금격차를 줄여가는 방안과 공통적인 임금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 93명과 전문상담사가 106명이 배치되어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립 난대수목원 완도에 유치해야 전남도는 14일 완도수산고등학교에서 '난대림,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난대림 활용방안과 발전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국립생태원 이상훈 박사 등 참석자들은 난대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휴양과 관광, 산업화 활용방안 등 다양한 발전전략을 논의했다.

## 광주시, 교통사고 잦은 13곳 환경 개선

영광동 사거리·무진대로 등  
차로 조정·교통신호기 설치

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 13곳에 대한 개선 사업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개선 사업은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연간 5건 이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해 차로 조정과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 사업이다.

대상지는 송정동 영광동 사거리, 남부대학교 사거리, 무진대로(우산동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앞-대한산업안전 협회 앞), 북구 각화동 문흥지구 입구 사거리 등으로, 동구 1곳, 서구 5곳, 북구 2곳, 광산구 5곳이다.

공사는 연말까지 시행된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무진로 일구 구간은 현재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교체하면서 일부 교통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한빛원전 가동 중단에 원전세 140억 덜 걷혀 지역민 손해

전남도의회, 2회 추경서 209억 편성

한빛원전의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가동 중단 사태가 빚어지면서 올해 거둬들이지 못한 원전세가 무려 1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원전 안전성 문제가 잇따르는데 따른 불안감 뿐 아니라 원전측의 부실한 운영과 관리로 인한 불이익까지 감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11일 열린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초 예산안(350억원)보다 40.3%가 감소한 209억원 규모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를 편성, 제출했다.

원전세는 특수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소방사무,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애초 올해 원전세를 350억원 규모로 예상했지만 지난 5월 '한빛 1호기 원전 열출력 이상 급증 발생 사건' 및 한빛원전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구멍), 내부철판(CLP) 부식 등으로 인한 가동 중단

으로 발전량이 줄면서 140억9000만원의 원전세를 거둬들이지 못하게 됐다. 전남도 설명이다. 애초 예상액보다 원전세 규모가 1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말까지 포함할 경우 영광의 경우 애초 예상액보다 97억5000만원이 줄어든 원전세를 받아야할 상황이고 원전 반경 40km 이내 지역인 무안·함평·장성·신안 등 4개 인접 시·군에게 돌아갈 원전세(34억원)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전남도가 원전세로 추진하는 원전 인접지역 환경방사능 분석 지원이나 방사능 방재훈련비 등 관련 사업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빛1호기 사건의 경우 원전 관리자의 조작 미숙과 안일한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다, 격납건물 공극도 시공 과정에서 원전측의 부실한 관리·점검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태.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원전 인근 지역민들의 경우 원전 안전성 문제로 인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모자라 원전측의 부실한 운영·관리로 인한 가동 중단 때문에 입는 손실까지 감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안팎에서 나온다.

/김지음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도, 美 오리건주와 민간 분야까지 교류 확대

김영록 지사, 한인회 지도자 접견

전남도가 국제 자매결연 지역인 미국 오리건주와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분야까지 교류 확대에 나선다.

1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임용근(John Lim) 미국 오리건 주의회 전 상원의원이 오리건 주 한인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문화 사절단을 이끌고 전남을 방문, 이날 김영록 지사와 두 지역 간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임 전 상원의원은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나 1966년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 1세대다. 1992년 오리건 주의회에서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뒤 3선의 상원의원과 2선의 하원의원을 지냈다.

김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임용근 전 상원의원은 케이트 브라운(Kate Brown) 오리건주지사의 공

식 초청장을 전달하고 두 지역 간 민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는 전남도와 오리건주가 자매결연을 한지 23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농업, 해양수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며 우호를 돈독히 해왔다.

김 지사는 "이번 오리건 한인회 지도자들의 방문은 전남도와 오리건주의 교류관계가 민간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가 두 지방정부 간 지속되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리건주 문화 사절단은 17일까지 1주일간 전남에 머문다. 이들은 15일 목포극동방송여성합창단과 합동으로 '2019 전라남도-오리건주 자매결연 기념 음악회'를 개최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내가 건넨 따뜻한 말 한 마디...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우리가 보낸 따뜻한 시선이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갑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117

광주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 전남 논·밭 불 피우려면 내년부터 119에 신고해야

'화재예방 조례' 일부 개정안 의결

2020년부터 119에 신고하지 않고 전남지역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다가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4일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장세일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 시 119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논과 밭 주변 소각으로 825건의 불이 나 재산피해 7억8600만원, 사망 6명, 부상 36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불을 피우려면 119에 사전 신고하도록 해 화재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법안이 개정됐다.

신고는 화재의 의심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하면 된다.

전남도소방본부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사전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통해 교육 및 홍보활동에 나서도록 해 도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화재를 예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